

이용처·금액 제한으로 부정수급 ↓... 안정성 보완은 필요

디지털화폐 CBDC 온다

〈하〉 디지털바우처

#. 2026년 중학생 자녀를 둔 김민선(35세·가명)씨는 지난해부터 용돈을 디지털화폐(CBDC)로 주기 시작했다.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는 사이 사먹는 음식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다. 김 씨는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 집에선 치즈, 우유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먹을까 우려가 됐다”며 “음식도 제한할 수 있고, 중학생들 사이에서 자주한다는 도박사이트 결제도 막을 수 있어 안심이다”고 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 CBDC는 디지털 바우처에서 가장 먼저 사용될 예정이다. 디지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사용자·품목·기한 등의 지급조건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 등 7개 은행 이용자 중 약 10만 명은 CBDC를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7개 국내 은행은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론키



/유투이미지

중개기관 가입 최소화·조건설정 특징 정부·기업 지원 보조금·상품권보다 부정수급 낮추고, 대금지급 빨라져 제한 통해 용도에 맞게 사용 가능 금융감시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사이버 공격 대한 대비 철저히 해야

반 지급·이체서비스를 신청했다.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바우처에 이용처·이용금액 제한

CBDC의 첫 활용처가 디지털 바우처가 된 이유는 중개기관의 가입이 최소화되고 사용자·품목·기한 등의 조건 설정을 할 수 있어서다. 지금까지 정부·기업 등은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상품권 등을 지급했지만 정산시스템이 복잡하고 느린데다 사후 검증방식으로 이뤄져 부정 수급 우려가 높았다.

예컨대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 취약계층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면 정부는 결제내역을

수동 검증해 대금을 지급한다.

현재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통상 결제일+3영업일 이내지만, 바우처의 경우 결제일+10영업일이다.

부정수급의 우려도 존재한다. 해당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만 갖고 현금으로 받는 현금강,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여행간 기간에도 수업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수업을 결제하는 등의 부정수급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적발기관 수는 2019년 142개소에서 2023년 176건으로 24% 증가했다.

CBDC를 활용할 경우 플랫폼을 통해 바우처 지급조건을 확인·결제할 수 있고, 판매물품과 가격이 자동으로 입력돼 대금지급도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CBDC를 디지털바우처로 활용하는 기능은 점차 확대돼 개인과 개인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단순하게는 자녀에게 학원비를 보내는 경우 학원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당뇨병이 있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는 경우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가당 음료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이체를 제한해 현금거래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 CBDC의 그늘 '금융감시수단'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CBDC의 활용이 금융감시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유럽 중앙은행제도(ESCB)는 소액에 한하여 중앙은행의 모니터링 및 승인 없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실험해봤지만, 결국은 전산으로 추적이 가능했다.

CBDC의 경우 개인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거나 통제를 쉽게 할 수 있다. 심지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운영체제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편의성을 위한 출발이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신설하고, 여성관리자 다수 기용”

조직개편·부서장 인사 실시

부서장 75명 중 74명 대거 재배치 조직 내 세대교체 가속화 ‘집중’ 금융약자 위한 소비자보호 역량강화

금융감독원이 디지털·IT 부문과 대부업·채권추심업 전담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는 등 금융약자를 보호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0일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 실시’하고 관련 인사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부서장 인사에서 돋보인 점으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과 업무 혁신을 위해 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 및 과감한

인재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부서장은 본부와 지원부서장 보직자 75명 중 74명을 대거 재배치했다. 기수별로는 주무부서장대상을 기존권역·공채 1기에서 공채 1~4기 및 경력 직원으로 크게 낮추고, 공채 5기까지 본부 부서장으로 배출하는 한편, 3급 시니어 팀장 6명도 본부 부서장으로 발탁했다.

연령도 1972~75년생 부서장을 주축으로 77년생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하는 등 ‘조직 내 세대교체 가속화’에 집중했다.

특히 신설된 디지털·IT 부문 책임자는 부원장보로 격했다. 금감원 측은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IT 금융혁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취약계층 등

금융약자를 위한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및 최근 감독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업·채권추심업 전담부서인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했다.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은 기존 2개팀, 14명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 7개 팀, 40명 내외 정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부업과 채권추심업에 대한 관리·감독 중요성이 커진 만큼 조직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대응팀’을 확대한다. 현재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

용대응 1·2팀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을 전담하는 팀을 추가해 1·2·3팀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수사 연계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치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도 보험리스크관리국은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개편했다. 다수 부서에서 수행 중인 보험상품 제도, 약관 심사, 감리 업무 등이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일원화된다.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검사3국 내 검사팀을 추가 신설하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수사팀도 종전 2개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민생침해 금융

범죄 적결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우수자원을 집중 배치했다. 특히, 분쟁조정3국에는 분쟁조정, 영업행위감독, 민생침해대응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두루 경험한 김세도 전 민생침해대응총괄국 팀장을 최연소(1977년생) 부서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특히 ‘여성 관리자’가 다수 기용된 것도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본부, 지원, 해외사무소, 대외과전 등 전 영역에 걸쳐 업무능력이 뛰어난 여성 부서장을 전면 배치했다. 김은순 회계감독국 국장, 정은정 은행검사3국장, 장영심 회계감독2국장, 김효희 인천지원장, 박정은 런던사무소장, 문재희 과전협력관 등 6명이다. 그간 비서실장이 담당해온 비서실 업무를 비서팀장이 운영하도록 하면서 출범 이후 최초로 여성 비서팀장(임잔디 팀장)이 기용됐다.

/허정원 기자 zelkova@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지배구조 전면개혁 예고

지배구조 개선·주주가치 회복방안 설명 주식 액면분할, 자사주 소각 등 시행 최윤범 회장 독단적 경영 문제 지적

고려아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내년 1월 23일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재구성 성공할 경우 주주들의 가치 회복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전면 개혁하기로 했다. 최윤범 회장 체제 출범 이후 고려아연의 주주 가치가 지속 하락했는데, 그 근본 원인이 지배구조에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MBK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대해 설명했다. 이날 MBK는 전체 주주 가치의 회복을 위해 주식 액면분할, 자사주 전량 소각, 분리선출 사외이사 후보 소수주주 추천 등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이날 “고려아연 주주 가치가 하락한 것은 숫자로 증명된다”며 “3~4년간 기업 지배구조가 나빠져서 기업 가치가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MBK는 자체 계산 결과 총 주주 수익률이 2021년 32%에서 2022년 15%로 하락했으며, 2023년에는 -5%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MBK가 계산한 총 주주 수익률은 기간 말 주가(주당 배당가액 포함)에서 기

간 초주가를 뺀 값을 기간 초주가로 나누는 값이다.

MBK는 최 회장이 이그니오흐딩스 인수, 원아시아파트너스(중학교 동창 사모펀드) 등 검증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불투명한 투자를 취임 후 약 38건(1조3000억원) 집행했다면서 최 회장의 독단적 경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 회장이 고려아연 공개대수 과정에서 차입한 대출금 9000억원을 포함해 고려아연의 최근 5년간 기업가치 훼손 규모는 약 2조50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MBK의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BK는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위해 집행임원제 도입을 통한 감독형 이사회를 구축하고, 주주 환원 및 참여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새 이사회에는 최윤범 회장 측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MBK는 주주환원 방안으로 ▲주식 액면분할을 통한 거래 유동성 증대 ▲보유 자사주의 전량 소각 ▲배당정책 공시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주주 참여 방안으로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 중 선임토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주주권의 보호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김 부회장은 “원아시아펀드 출자와 이그니오흐딩스 투자와 같이 무분별하고 검증 안된 투자 행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최 회장의 독단 경영을 감시하지 못하는 현재의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고려아연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